

서울시 “부지값 4671억… 조정 가능” vs 대한항공 “대금분납은 현실 모르는 얘기”

송현동 부지두고 ‘줄다리기’… 원원 타결안 나올까

대한항공, 서울시 ‘공원화 계획’에 입찰기업 없어 유동성 계획 차질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서울시 “금액·시기 문제 등 검토 행정적 지원 등 지속적 협의할 것”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매각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양측이 딜 조건의 합의로 ‘원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한항공이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최근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당함을 알리고자 권익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매각 일정과 관련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월 이사회를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뉴스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유류자산인 송현동 부지를 비롯해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달 초 송현동 부지의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해 이 같은 자구책에 제동이 걸렸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선언으로, 당초 인수 참여 의지를 보였던 기업마저 예비 입찰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내년 말까지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당시 맺은 특별 약정에 이 같은 안전이 포함됐기 때문. 송현동 부지의 매각도 2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약 5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5000억원 미만의 보상비를 당장 일괄 지급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부지를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고충 민원 신청서 제출에 대해 “입장은 따로 없다”면서도 “공원화를 해서 시가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원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 간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향후 대한항공 측에 협의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며, 대한항공도 부지 매입의 조건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시한다면 서울시에 팔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드릴 것이고 최대한 원만하게 거래 한다”며 “시의 입장 차이는 지금 금액적인 차이나 시기다. 예타 기준이지만 4670억~4700억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하면 좀 더 올라가서 비숫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금액은 분명 조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은 대한항공이 내년까지 2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 계획상 절차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며 “그 외에 기타로 대한항공이 필요한 것들 등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결국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니 협의해 보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도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금액

등 조건을 제대로 제시했을 때 팔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당장 땅을 팔아서 지금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대금을 나눠서 준다는 등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이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서울시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등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충 민원에 대한 결과는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나올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접수가 되면 신청인(대한항공)이 일단 신청서를 내고, 필요할 경우엔 (권익위에서) 추가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또 피신청인에게 설명자료를 제출받는다”며 “서울시가 내린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가 있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신청인의 신청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조치 관련 강제성 여부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 말 그대로 권고다. 그런데 권익위가 권고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수용을 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코로나19 확산세에 경북공 휴관 연장

립과 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수도권에 있는 실내·외 관람 시설에 대한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함에 따라 국립공립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수도권에 있는 실내·외 관람 시설에 대한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

ICT 수출액 139.3억 달러… 2.6% 감소

과기정통부, 5월 ICT 수출입 통계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은 수출이 줄어든 반면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5월 ICT 수출입통계(잠정)’를 통해 ICT 수출은 139억3000만 달러, 수입은 7.8% 감소한 8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0억1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했지만 15.3%가 줄어든 지난달과 비교하면 5월 수출 감소폭은 크게 축소된 것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8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SSD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월 동월 대비 73% 증가한 1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생산량 조정 및 OLED 패널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21.1% 감소한 1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휴대폰도 글로벌 수요 감소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21.5% 줄어든 7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금융위, 전자금융사고때 금융사 책임 확대

규제입증위원회서 규제 26건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등 2개 법령 심의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고, 전자금융업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을 포함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입증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임·관리하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도 늘린다. 발행한도가 200만원이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전자금융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도 늘린다. 현재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기술신용평가업을 특허법인, 회계법인까지 확대한다. 기술신용평가업은 산업위험과 해당 기업의 경영능력,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 기업의 재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상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목적 검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

용정보업자도 보유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데이터 관련업무를 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신용정보법상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하는 법안도 개정한다. 5년 이내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5년 이내 삭제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115@